도서관 현장의 지적자유 침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1)]

1. 조사 개요

- 대상 : 한국도서관협회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단, 도서관별 대표 1인 답변 유도)
- 목적 : 도서관 현장의 지적자유 침해 사례 파악을 통한 협회(전문단체)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 기간 : 2023. 10. 6 – 2023. 10. 31
- 설문 문항 : 지적자유 침해 형태, 검열 도서,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 도서관의 대응 방식, 지적자유 수호 방안 등 6개 영역으로 구성

2. 조사 결과

2.1 인구통계학적 특성

- 응답 기관 : 426개관
- 지역별 분포 : 충북 > 경기 > 서울 순으로 많음
- 관종별 분포 : 공공도서관(59.8%) > 학교도서관(34.5%) > 대학도서관(3.1%) > 전문도서관(0.5%) > 기타
  - 공공도서관의 운영 주체별 분포 : 지자체(52.2%) > 교육청(31.8%) > 위탁(15.3%) > 사립(0.8%)

〈표 1〉 응답기관의 관종별 분포(n=426)

구분	빈도	비율(%)	비고
공공도서관*	255	59.8	*공공도서관 운영주체별 분포(n=255)
학교도서관	147	34.5	
대학도서관	13	3.1	
전문도서관	2	0.5	
특수도서관	0	0.0	
기타	9	2.1	
계	426	100.0	

구분	빈도	비율(%)
지자체	133	52.2
교육청	81	31.8
위탁	39	15.3
사립	2	0.8
계	255	100.0

2.2 지적자유 침해 방식

- 최근 3년간 지적자유 침해는 기관별로 1~148회로 다양하며, 침해 방법은 공문 및 성명서를 통한 침해(36.9%), 홈페이지 건의(10.4%), 전화민원(9.7%) 순으로 조사됨. 그 외 국민신문고 59건, 정치인의 문의와 자료목록 요구 8건 등 다양한 방식의 지적자유 침해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침해 주체는 특정단체(모임)에 의한 비율이 50.4%로 가장 높았고, 개인(21.9%), 상위기관(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요구사항은 해당 자료의 폐기(32.5%), 열람 제한(32.3%), 자료검색 배제 처리(10.3%) 순으로 높게

1) **본 설문 데이터는 한국도서관협회의 허락 없이 이용이 불가합니다. 추가적인 분석은 학술논문과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신 도서관 현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타남

- 도서관에 가해지는 압력의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압박(22.5%), 담당자 문책 요구(7.0%), 도서관 이용 방해(5.4%)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도 욕설과 협박, 방문 시위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지적자유 침해 방법(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공문 및 성명서	209	36.9
홈페이지 건의	59	10.4
전화민원	55	9.7
상위기관 요구 및 지시	52	9.2
방문 및 면담	36	6.4
기타	155	27.4
계	566	100.0

〈표 3〉 지적사유 침해의 주체(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특정단체(모임)	274	50.4
개인	119	21.9
상위기관	57	10.5
기타	94	17.2
계	544	100.0

〈표 4〉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민원인의 요구(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자료 폐기	248	32.5
열람 제한	246	32.3
자료검색 배제 처리	79	10.3
소장 장소 이관	44	5.8
자료선정위원회·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요구	29	3.8
관리자 책임·징계 요구	18	2.4
기타	98	12.9
계	762	100.0

〈표 5〉 지적자유 침해 민원으로 도서관에 가해지는 압력의 방법(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압박	109	22.5
담당자 문책 요구	34	7.0
도서관 이용 방해	26	5.4
욕설과 협박	12	2.5
방문시위	16	3.3
기타	287	59.3
계	484	100.0

2.3 검열도서

- 검열도서의 주제 및 대상자료는 어린이 자료(32.8%), 청소년 자료(25.4%), 정치·사상(14.9%) 순으로 조사됨
- 검열의 목적 및 이유는 선정성 > 성소수자 이슈 > 양성평등 이슈 > 정치·사상적 편향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검열도서 목록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여가부가 선정·보급한 나다움도서 목록 전체(148권) 혹은 일부를 제출한 기관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정치·사상적 편향 도서, 역사 왜곡, 저자 이슈(범법행위 등), 혐한도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음

〈표 6〉 검열도서의 주제 및 대상자료(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어린이 자료	264	32.8
청소년 자료	204	25.4
정치·사상	119	14.9
종교	29	3.6
역사	22	2.7
문학	17	2.1
과학	14	1.7
예술	8	1.0
기타	127	15.8
계	804	100.0

〈표 7〉 해당 도서의 검열 목적 및 이유(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선정성	260	25.2
성소수자 이슈	250	24.3
양성평등 이슈	211	20.5
정치·사상적 편향	118	11.5
종교적 편향	41	4.0
폭력성	34	3.3
역사적 왜곡	31	3.0
과학적 오류	4	0.4
기타	81	7.8
계	1,030	100.0

2.4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

-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은 자료선정권 침해 및 자기검열에 대한 압박(25.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서비스 위축(16.8%), 도서관 일상 업무 방해(16.0%), 전문가적 자존심 상실과 직원의 사기 저하(각 10.7%), 법적 소송에 대한 불안감(7.5%) 순으로 나타남

〈표 8〉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자료선정권 침해 및 자기검열에 대한 압박	322	25.3
자료(대출, 열람) 서비스 위축	214	16.8

도서관 일상 업무 방해	204	16.0
전문가적 자존감 상실	136	10.7
직원의 사기 저하	136	10.7
법적 소송에 대한 불안감	94	7.5
도서관 인지도(위상) 약화	52	4.1
없음	51	4.0
도서관의 범죄 집단화	36	2.8
기타	27	2.1
계	1,272	100.0

2.5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도서관의 자체 대응 현황

-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된 도서관의 명문화된 지침 혹은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426개관 가운데 22개관(5.2%)에 그치고 있고, 도서관의 자체 대응은 민원 수용(26.6%), 관내위원회 의뢰(24.2%), 수용불가 처리(22.0%) 순으로 조사됨

〈표 9〉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도서관의 자체 대응 현황(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민원 수용(폐기, 장서배제, 검색불가처리, 이관 등)	158	26.6
관내 위원회(도서관운영위원회·자료선정위원회 등) 의뢰	144	24.2
수용불가 처리(도서관인윤리선언 등 국내외 선언문 근거 제시)	131	22.0
상위기관 및 전문단체 의뢰	49	8.2
기타	113	19.0
계	595	100.0

2.6 지적자유 수호 방안

- 지적자유 수호를 위하여 도서관 현장은 협회(전문가단체) 차원에서 관종별 대응 가이드라인 제정(48.6%), 상위 행정기관 대응(24.8%), 법적 대응 방안 마련(19.7%)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3. 시사점

-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특정 민간단체에 의한 자료의 폐기·열람 제한·검색 배제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도서관 현장에서는 도서관 일상업무의 방해와 소극적 자료선정 및 자기검열이라는 2차적 지적자유 침해와 전문직으로서의 자존감 상실 및 사기 저하를 겪고 있음
-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도서관 및 사서의 개인적 판단이나 조치를 넘어서는 범국가적 혹은 도서관계 전반의 보편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력을 키우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